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청년실업 해소대책 연구

- ◆ 훈련기간 : 2012.07.14 ~ 2014.07.13
- ◆ 훈련기관 : 미국 노스이스턴대

제출자 : 이춘구

청년실업 해소대책

□ 제안배경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해야 할 청년층의 고용창출이 부진함으로써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
-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요구됨
- 각 지역의 노동시장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도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실효성을 기대
 - ※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로 '10년 이후 4년만에 세계성장률을 상회하는 3.7% 성장 예상(실업률 3.5%)

□ 기존 청년실업 대책 평가

- 공급측면 중심의 사업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은 전반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공급측면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요측면의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정도에 불과
- 지나친 포괄성과 조율방안의 부재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당사자인 노사간의 관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산업 정책과 같은 관련정책과의 구체적 조율 방안도 없는 실정
- 체계적 관리의 미흡
기존의 대책은 각 사업을 청년고용대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성과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유사한 사업으로 인한 비용 중복의 문제가 발생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을 위한 대책의 부족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눈높이 격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 노동력의 공급 측면의 대책들이 강조되고 있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을 위한 대책은 부족,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채용장려사업 등의 경우 단기적이며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은 미미하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준

□ 시책 제안

○ 지역의 청년층 고용 관련 전담 기구의 설립

현재 경기지역에는 지역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가 청년층 고용촉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

- 지역의 고용센터를 단순한 직업알선이나 교육훈련의 안내라는 기존의 기능에서 벗어나 구직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직업알선 및 상담, 개발 및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으로 구축
- 최소한 도청 내에 경기지역의 청년실업 현황 분석, 청년층 고용구조 분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층 고용 관련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집행·평가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도 필요

○ 청년고용 할당제 조기 도입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층 고용을 의무화

※ 벨기에-2000년 4월부터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3% 이상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행할 경우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면해주고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소위 로제타플랜(Rosetta Plan)을 시행

- 경기지역에 자회사 또는 공장을 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에 이 조항을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는 대기업과 청년층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각종 지원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청년층 일자리 질적 수준의 제고 및 직능별 미스매치의 해소

-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각종 복리후생 및 편의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고용친화적 산업단지로 리모델링
-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사업 시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청년층 구직자들 취향을 고려한 각종 복리후생 및 편의 시설의 확충에도 초점
-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인력으로 양성

※ 독일에서는 1999년부터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실업

자에게 다양한 연수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실무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산학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인력 양성사업 홍보 및 기업과 교육기관과의 매칭 촉진, 기업의 필요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에 노력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의 육성
 -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면서 청년층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
 - ※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은 12.6%, 덴마크 31.3%, 영국 26.9%, 독일 25.0%, 일본 16.0%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자생력 있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층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하나의 좋은 방안
 -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청년층 고용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

□ 기대 효과

-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한정된 일자리 예산, 인력 등의 한계 극복
- 청년 취업지원을 통한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